

'정당 정치' 실종... 3당 비대위 체제

내부 문제 해결 급선무... 추경 편성·세월호 특조위 연장·야당 공조·개헌론 등 차질 예상

원내 교섭단체 3당이 내용에 빠지면서 정치가 실종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안철수 전정배 공동대표가 2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3당은 정상적인 당 대표가 없는 비상대책위 지도부 체제로 전환했다. 이는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정당 정치'의 실종이다.

이미 비상대책위 체제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8월 9일과 8월 27일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꾸릴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당 대표 사퇴로 당분간 비상대책위 체제를 유지해야 할 전망이다. 3당의 리더십이 적어도 8월까지의 공백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경제 관련 법안들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민감한 현안에 대해 당 대표가 책임을 지고 여야가 협상을 해야 하는데 원내교섭단체 3당 지도부가 모두 임시체제 대표이기에 얼마만큼 당내 여론을 결집시킬지 의문이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 가슴기 살균제 피해 문제 청문회 등 현안에 대한 국회 차

원의 대응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야권 공조도 원활치 않게 됐다. 민감한 현안에 대해 두 야당이 공조한 뒤 정의당까지 포함시켜 대어(對野) 공격에 나서야 하지만 지도부 공백으로 이도 여의치 않게 된 것이다.

3당 내부에서 제기된 '개헌론'에 대해서도 추진 동력이 떨어지게 됐다.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의 '식물 국회'다.

3당 중 가장 급해진 건 국민의당이다. 당내 38명 의원 중 23석이 호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다.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물색하지 않을 경우 호남 출신 지도부가 설사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순화규 전 더민주 고문 영입설도 있지만 때론 이 야기다.

따라서 '호남 지민권' 이미지가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 또 안철수 대표가 당 밖에서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행보를 이어갈 경우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더라도 제대로 된 리더십이 발휘될지 의문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도 상황은 비슷하다. 8월 전대 이후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

는 상황은 아니다. 물론 새누리당의 경우 친박계 최경환 의원이 당권을 잡으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비박진영과의 골 깊은 갈등으로 온전한 리더십 유지는 쉽지 않다.

더민주도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으로 당 전체가 뒤숭숭하다. 더구나 서 의원에 대해 강하게 징계하자는 공천 당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되고, 약하게 징계하자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고 고 민이다.

서 의원 논란을 비판하던 새누리당도 박인숙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박 의원이 5천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으며 지역 당협 사무실에서 회계를 보던 동서를 올해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돌연 유탄을 맞은 형국이다.

이처럼 3당이 나란히 내용에 휩싸인 채 사태 진화에 급급한 탓에 법안 처리와 현안 대응에는 신경 쓸 겨를도 없어 보인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모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의원 특권에 관한 것을 떠나서 국회 윤리규범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의원 윤리규범이 400쪽이나 된다. 거기에 이런 일을 해선 안 된다"고 상세하게 나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상세화할 필요가 있다. 또 국회 윤리특위를 현재보다 강화하고 위상도 높여 줘야 한다. 그리고 윤리특위에서 나온 결정을 따르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 정치'의 실종을 야기한 것이 결국은 정당 내부의 국회의원 비리 의혹에서 비롯된 만큼 이에 대한 근절책 마련이 우선시 돼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성주 기자

최은희 도의원, 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3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최 의원은 전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와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과 전북권 공학유치원을 위해 적극 나서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 제정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 의원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했을 뿐인데 의정대상까지 수상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우수한 정책을 적극 발굴해나가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민형 기자

김광수, '국회의원 셀프채용금지3법' 발의

최근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선임'을 금지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법안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 국민의당)은 29일 국회의원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의 보좌진 채용 금지와 선거사무장 선임 금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국회의원 셀프채용금지3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청년실업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이른바 '친인척 셀프채용'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매우 높다"며 "지난 25일 본 의원은 법안 추진 의지를 밝혔고 법안 발의를 했는데 마침 오늘 새누리당에서도 친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금지 시키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보좌진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또한 투명성이 요구되는 직책"이라며 "일명 '국회의원 셀프채용금지3법'의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진 채용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사무장 및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민형 기자

김종인, 브렉시트·구조조정 질의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와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 등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질의에서 "조선3사가 자구안을 내놨는데 이는 유가상승을 전제해 자구안"이라며 "유가가 내려가면 조선3사가 내놓은 자구안은 전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브렉시트에 관해선 "정부가 브렉시트로 인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지나칠 정도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영국계 자본이 우리나라에 투자해 얻을 것이 있다고 판단해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금방 자금유출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주 기자



동물복지국회포럼 출범식. 우상호(앞줄 왼쪽 7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물복지국회포럼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상호 "대선은 시대적 과제 정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차기 대선과 관련, "단순히 정권을 새누리당에서 더민주로 바꾸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월항쟁 30주년 기념 연속 토론회'에 참석해 "정권교체에 담아야 할 우리의 시대적 과제를 정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지만 30년 전 우리는 집단의 꿈이 있었다.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꿈이었다)"며 "새로운 민주정부가 수립되면 어떻게 바뀔까 가슴이 벅차기도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어 "6월항쟁 30주년이 되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다가온다. 정권교체를 넘어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위해 누군가는 그런 꿈을 설계하고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이런 꿈이 국민에게 보편적 동의를 얻고 다시 또 대열에 동참해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해보자"고 덧붙였다.

함께 참석한 이인영 더민주 의원은 "6월항쟁에서 승리하고 대선은 패배했던 대가 뒤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단결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배한다. (내년 대선에서) 야권의 3차 필승론은 개인적으로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이성주 기자

추혜선, 미방위 배정 요구 접어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재배정 요구를 철회하고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오늘 미방위 재배정 요구성을 끝내고 외교통일위원회 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주 기자

'대표직 사퇴' 안철수의 향후 행보는

평의원으로 '조용한 대선 행보' 밟을 듯... 시간 지나면 '강연 정치' 등 나설 가능성

국민의당을 이끌어온 안철수 삼임공동대표가 29일 '김수민 사태'로 끝내 사퇴해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안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은 후 어떤 활동으로 대중들의 관심 영역에 머무르지 주목된다.

일단 안 대표가 대표직을 스스로 던졌으니 더 이상 당 지도부 구성에 간여하거나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은 표면적으로 삼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의 간판인 안 대표가 현안을 도외시한 채 외부 활동에만 매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구나 바로 공개적인 외부 활동에 나서는 모습은 부자연스럽다. 안 대표로서는 자숙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당분간 공개 활동을 자제할 공산이 크다.

그렇다고 '침묵'에 돌입하는 것은 부담

이 아닐 수 없다. 안 대표가 4·13 총선을 전후해 '일하는 국회'를 주창해온 만큼, 침묵에 들어갈 경우 자신이 한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일단 안 대표는 일반 의원의 신분으로 의정활동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신이 주창했던 교육혁명 등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삼민주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에 주력하리라는 게 중론이다. '조용한 대선 행보'를 평의원으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불명예 퇴진 성격인 만큼, 2017년 대선 가도를 고려하면 분위기를 반등할 계기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 비리 의혹으로 물러난 당대표라는 이미지를 대선 전까지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안 대표가 '안철수 신드롬' 재

현을 위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강연 정치 등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선 안 대표의 이날 사퇴가 향후 대선 가도를 고려했을 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표직을 내려놓음으로써 김수민 사태에 대해 당 대표로서 질 수 있는 가장 강한 수준의 책임을 졌다는 명분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앞으로 김수민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안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일반 의원으로 돌아간 이상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게 됐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안 대표로서는 선 순례를 할 게 없다"며 "당대표직을 유지했으면 수사에서 뭐가 나올 때마다 계속 욕을 먹었을 텐데 이제부터 할 일은 다 했다"고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성주 기자

보훈처 "김일성 친인척 서훈 취소"

당초 '포상 기준에 맞는다'는 입장 번복

국가보훈처가 북한 김일성 주석의 친인척을 서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국민 정서와 배치된다는 것이 보훈처의 설명이지만, 당초 "포상 기준에 맞는다"는 입장을 번복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훈처는 29일 입장자료를 내고 기준에 수순자로 선정됐던 김일성의 삼촌 김형권과 외삼촌 강진석에 대해 "국가정체성과 국민정서를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 논의와 상훈법 개정 등을 통해 취소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보훈처는 이에 더해 독립운동 서훈에 대한 새 심사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승훈 보훈처장이 지난 28일 국회 정부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김일성의 부모인 김형직(부)과 강반석(모)에게도 훈장을 줄 수 있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검

토해보겠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서는, "포상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의 포상 기준의 원칙적인 측면에서 답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 27일 서훈 논란과 관련, "강진석은 1945년 이전인 1942년 사망했기 때문에 북한 정권과는 관련 없다"며 "그의 공적 내용은 포상 기준에 맞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체부 기자

새누리, 8촌 이내 보좌진 채용금지 결정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8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새누리당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족 보좌진 채용에 집중 포화를 퍼붓다가 자당 박인숙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이 드러나자 이같은 자구책으로 급대응에 나선 셈이다.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직후 브리핑을 통해 "친인척 채용 관련, 비대위는 8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 대변인은 또 "당규에 규정돼 있는 윤리위 규정, 2장 3절 22조를 보면 예전에 있었던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로 돼 있는데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가 아니라 입건 즉시 윤리위 회부하는 결과 내용을 수정 의결했다"고 전했다. '파렴치한 의 기준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라며 "기준에도 당규에도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용어가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진석 원내대표는 29일 박인숙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에 대해 "박 의원과 전화통화를 했고, 즉각 사과하고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더민주의 서영교 의원 경우와 경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맞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집단을 상대로 보좌진 채용 사항을 전수조사하는 방침을 추진키로했다. 그는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밝히고 시정할 게 있으면 즉각적인 시정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윤리 규정강화 방안을 내달 6일 의원총회를 열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주 기자

새누리, 전당대회준비위 구성안 의결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29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준비위원장은 박명재 사무총장이 맡았으며 분과위는 2개로 나눠 각 분과위원장 1명에 위원 3명씩 선임됐다.

행사준비 분과위원장은 김기선 제1사무부총장, 위원은 지상욱 대변인, 김현아 신보라 의원이 맡았으며 당헌당규 개정 분과위원장은 최고일 법률지원단장, 위원은 윤한홍 의원과 손교명 조상규 변호사가 선임 의결됐다. 올해 정기시도당 대회는 6월 30일부터 7월 12일까지 총 13일 동안 개최되도록 의결했다. /이성주 기자